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변화와 원인

Changes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규모가 커지고 빈곤의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경상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의 규모는 축소되고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상위층의 비중과 상위층 소득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¹⁾.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소득불평등’ 포럼 내용에 따르면,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위층의 소득증가율이 하위층의 소득증가율보다 높고, 지니계수가 1980년도 후반부터 대체로 증가하였다. 국가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어느 정도의 소득 차이는 사람들을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고 자신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저축을 하는 등의 개인적인 발전에 인센티브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소득의 차이가 클 경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소득이나 부가 집중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소득이나 부의 혜택이 적게 분배될 경우,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회불평등은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정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부족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의 부족은 세대간 소득 이동이 막힘의 원인이 되어, 부자는 계속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으

1) 강신욱 외(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로 살아갈 확률을 높인다.

한편,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범죄나 폭동과 같은 파괴적인 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내재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상위층과 하위층의 사람들에게 정책에 대해 다른 선호도를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집단간의 갈등과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특정 소득계층이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정치적 제약으로 작용하여 거시적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

이러한 시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개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OECD의 '소득불평등' 포럼 내용을 통해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변화와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재분배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소득불평등의 변화

지난 20년간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 OECD 국가의 지니계수³⁾는 평균 0.28이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평균 0.31로 증가하였다. 지니계수의 증가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스웨덴, 체코,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 지니계수보다 낮지만 지난 20년간 지니계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터키, 칠레, 그리스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 지니계수보다 높지만 지난 20년간 감소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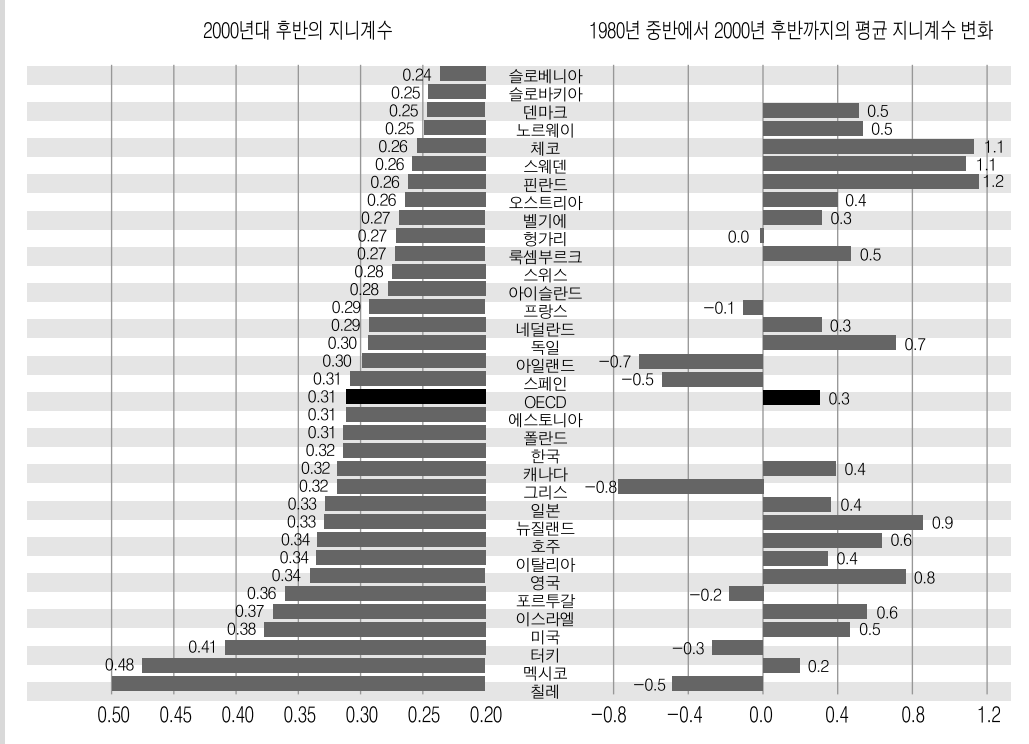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최근 10년간 보다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10년간이 더 크게 변화하였다. 지난 20년간 핀란드, 뉴질랜드는 소득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일랜드와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약간 감소하였으며, 그 외 14개의 국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표 1 참조).

지난 20년간 OECD 국가들의 가구크기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가처분가구소득이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소득하위 10% 가구는 실질가처분소득이 평균 1.4% 증가한 반면, 소득상위 10%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은 평균 2.0% 증가하였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하위 10% 가구보다는 소득상위 10% 가구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성장속도는 영미권 국가의 일부와 북유럽 국가의 일부, 이스라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소득

2) 황진영(2008), 불평등과 경제활동, 산문출판.

3)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기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0에서부터 1까지를 나타냄. 0에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어 소득불평등이 높음을 나타냄.

그림 1.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변화



자료: OECD(2011),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하위 10%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있다(표 2 참조).

2008년 소득상위 10% 계층과 소득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은 약 9배의 차이를 보였다. 북유럽국가와 중유럽국가들은 소득상위 10% 계층과 소득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배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칠레와 멕시코는 25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어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불평등의 증가는 소득하위 계층 및 소득

중간 계층보다 소득상위 계층에 더 영향을 받는다. 즉, 상위층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3. 소득불평등의 원인⁴⁾

소득격차의 증가는 대부분의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OECD

4) 2011년 5월 OECD 포럼에 기재된 'Tackling Inequality'와 2008년 OECD 보고서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를 기초로 함.

표 1.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변화(1980년 중반~2000년 중반)

소득불평등 변화정도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크게증가	체코,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 영국	캐나다, 핀란드,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약간증가	벨기에,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변화없음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호주, 벨기에, 체코,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
약간감소	-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크게감소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터키	

주: OECD 소득분배 설문을 기준으로 산출함. '크게 증가/감소'는 지니계수 변화가 2.5%포인트 초과함을 의미함. '약간 증가/감소'는 지니계수가 1~1.5%포인트가 변화한 것을 의미함. '변화없음'은 지니계수 변화가 1%포인트 미만임을 의미함.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의 경우 199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변화 데이터임.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 데이터임. 스위스의 경우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변화를 의미함.

자료: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표 2. 가구 실질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198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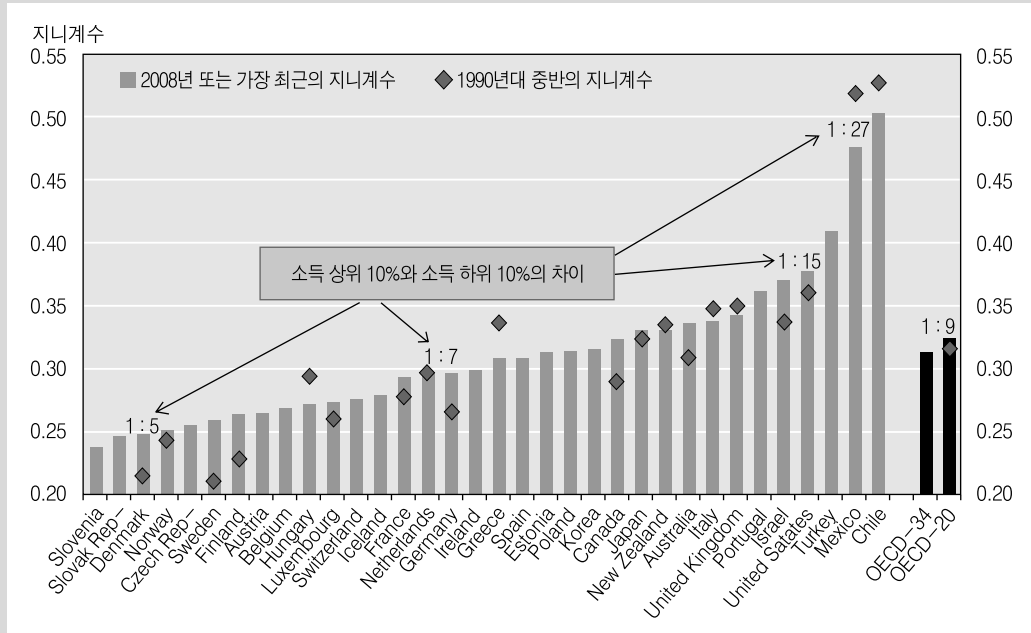
구분	전체	소득하위 10%	소득상위 10%
호주	3.6	3.0	4.5
오스트리아	1.4	0.4	1.6
벨기에	1.0	1.7	1.5
캐나다	1.1	0.9	1.6
칠레	1.5	2.5	1.0
체코	2.7	1.8	3.0
덴마크	1.0	0.7	1.5
핀란드	1.8	1.3	2.7
프랑스	1.2	1.6	1.3
독일	0.9	0.1	1.6
그리스	2.1	3.4	1.8
헝가리	0.6	0.4	0.6
아일랜드	4.7	4.5	3.7
이스라엘	1.7	-1.1	2.4
이탈리아	0.8	0.2	1.1
일본	0.3	-0.5	0.3
룩셈부르크	2.3	1.8	2.8
멕시코	1.4	0.8	1.7

〈표 2〉 계속

구분	전체	소득하위 10%	소득상위 10%
네덜란드	1.4	0.5	1.6
뉴질랜드	1.5	1.1	2.5
노르웨이	2.3	1.4	2.7
포르투갈	2.2	2.4	2.3
스페인	3.7	6.0	3.0
스웨덴	1.8	0.4	2.4
터키	0.5	0.8	0.1
영국	1.9	0.9	2.1
미국	1.3	0.5	1.9
OECD-29	1.7	1.4	2.0

주: 실질가처분소득은 가구의 크기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반영함. 2008년 후반의 데이터를 활용함(단, 체코,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터키는 2007년, 칠레, 일본은 2008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은 2000년 데이터임). 1985년 초반의 데이터를 활용함(단,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은 1983년,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는 1984년, 핀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는 1986년, 아일랜드는 1987년, 그리스는 1988년, 헝가리 1991년, 체코는 1992년, 호주, 포르투갈은 1995년 데이터임).
 자료: OECD(2011), OECD Forum on Tackling Inequality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What Drives it and How Can Policy Tackle it?"

그림 2. OECD 국가의 상위층과 빈곤층간의 차이의 변화



주: OECD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자료: OECD(2011), Tackling Inequality.

포럼에 기재된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세계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기술력의 진보, 산업화의 규제개혁에 따른 변화를 언급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가족형태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세금과 보조금의 혜택이 가구소득 재분배 방법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전문적인 원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을 낮히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소득불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후속 보고서에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본 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가족구조, 세금 및 보조금 제도에 의한 소득불평등의 증가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시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같은 국제무역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세계화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개도국의 빈곤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주류경제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세계화론자들은 이러한 세계화는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⁵⁾. 몇몇의 선진국가들은 세계화를 통해서 경제성

장에 성공했지만 1980년대 이후 개도국들의 전반적인 경제적 성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국가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각국 내에서의 소득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에게 높은 보상을 주었으며 그에 따른 급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는 고임금을 받게 되어 소득이 높아진 반면, 그렇지 못한 근로자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임금의 수준이 낮추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고 10%의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최하 10% 이하의 낮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가구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임금소득의 차이는 불평등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전문적인 기술력의 욕구가 급증하는 현상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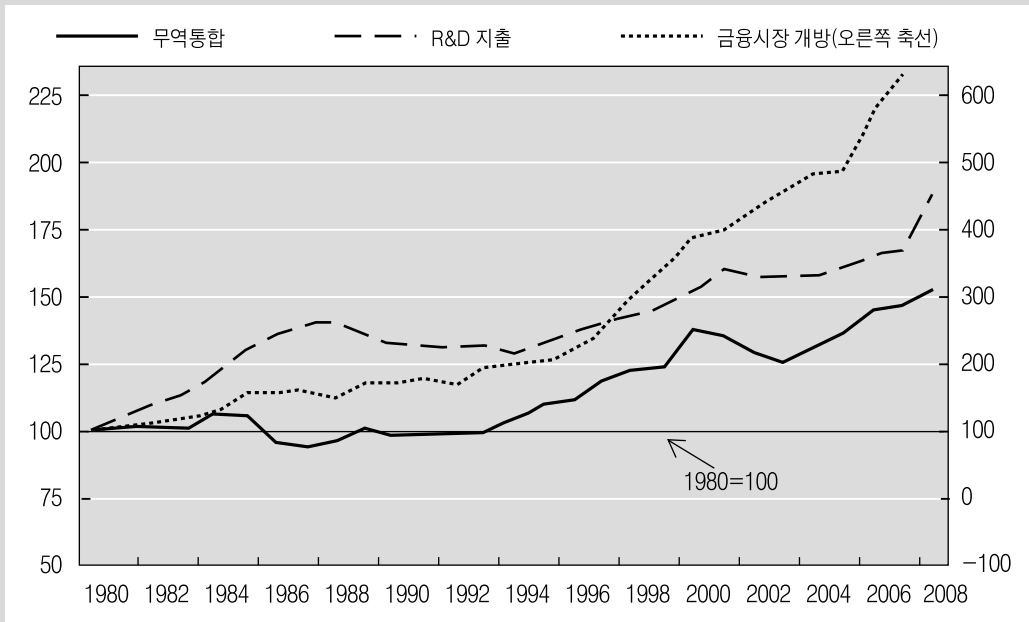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하위계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상위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은 소득상위 계층에서 소득중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소득중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시켰다. 즉, 고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상승 비율이 하위계층 뿐만 아니라 중간계층 소득자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5) 프레시안에 연재된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중 '(12) 세계화의 두 얼굴', '(13) 여전히 갈라진 세계'의 내용을 인용함(2004.09).

한편, 글로벌한 금융 및 무역시장의 변화는 기술력의 진보와도 관련이 있다. 글로벌한 경제 통합은 국제무역과 대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해외아웃소싱을 증가시켰다. 특히 FDI는 1980년 GDP의 5% 이하 이었던 부분이 2000년 말에는 거의 50%로 증가하였으며, 해외아웃소싱을 주는 산업도 증가되어 다국적 기업국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국제무역은 기술력에 편향

되어 진보하게 되었으며, 부유한 국가의 기술력 있는 근로자에게는 높은 급여의 지급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득이 낮은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증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헉셔-오린 정리(Theorem of Hecksher-Ohlin)⁶⁾라 불리는 국제무역이론을 옹호한다. 즉, 부유한 국가에서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가난한 국가의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불평

그림 3. OECD 국가의 무역통합, 기술적인 변화, 금융시장 개방의 변화추이(1980~2008년)



주: 1980년을 기준으로 그 변화를 살펴봄. 무역통합은 수입과 수출의 합을 GDP 비율로 계산함. R&D는 연구와 개발의 사업부문 지출을 GDP 비율로 계산함. 금융개방은 국가간의 부채와 자산을 GDP 비율로 계산함.
 자료: OECD(2011), OECD Forum on Tackling Inequality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What Drives it and How Can Policy Tackle it?"

6) 헉셔-오린 정리(Theorem of Hecksher-Ohlin)는 생산요소 부존량 비율의 차이와 생산량 사이의 요소집약도(즉, 요소투입 비율)의 차이로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며 각국의 무역형태를 결정한다는 이론임. 즉, 각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을 특화하여 상대적으로 희소한 요소를 사용하는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국가분업의 이익을 얻는다고 보고 있음('불평등과 경제활동(황진영, 2008)에서 인용함).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자유투쟁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들은 고용보호법의 규제가 완화되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도 하였다. 1980년대부터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최소임금은 감소하였고 실업수당에 대한 대책이 감소하였으며 고용보호법이 느슨하게 되었다. 즉, 낮은 기술력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그 일자리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이다.

최근, 여성근로자 증가비율은 남성근로자 증가비율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는 비정규직이거나 파트타임의 일을 하며 적은 월급을 받고 있다. OECD 국가의 전체 근로자 중에서 파트타임의 근로자는 1990년 중반 평균 11%에서 2000년 후반에는 약 16%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4.3%에서 2008년 9.3%로 증가하였다⁷⁾. 비정규직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대부분이 저임금에 낮은 생산력을 가진 일을 하며 일반적인 사회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근로소득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며,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자영업자의 증가는 미묘하지만 소득불평등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보다 소득측정이 불명

확하여 정확한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은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둔화되었으며, 특히 소득 하위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였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분위 분포는 점차 하위분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⁸⁾. 그 밖에도 자본소득, 자산, 투자, 저축 등의 사적이전소득은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구조

2011년 7월 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1990년 이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2인 가구비율 24.3%, 1인 가구비율 23.9%, 4인 가구 비율 22.5%)⁹⁾. 오늘날 저출산·고령사회로 인구가 변화하고 단독가구, 한부모 가정, 자녀가 없는 부부, 노인가구들이 증가하였다. 가구 규모의 축소는 가구내 근로자의 수를 감소시켰으며, 가구의 전체 수입을 한 명의 가구원 수입에는 의존하는 비율을 높게 된다. OECD 회원국에서도 근로연령 가구원의 수입이 가구수입에 기여하는 정도가 1980년대 후반 15%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20%로 증가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동일한 계층간 결혼(assortative mating)'이 증가하고 있다. 동일한 계층간 결혼은

7) 통계청,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각년도.

8) 강신욱 외(2008),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비슷한 교육수준과 비슷한 소득수준의 잠재력을 가진 상대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소득상위 계층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비슷한 계층의 이웃들과 어울리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같은 소득분위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울리는 비율이 1980년 중반에 33%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0년 후반에는 4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소득불평등은 자녀의 교육투자와 관련성이 있다.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의하면 부모는 청소년 자녀에게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금전적 자원과 시간을 투자를 하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자녀 교육에 기회비용이 매우 높게 된다. 저소득층에서는 자녀 학비의 지출을 늘리는 경우 의식주와 같은 필수적인 생활비에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를 줄이게 된다¹⁰⁾. 반면에 부유한 계층의 사람의 경우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며, 자녀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업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구의 소득은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주고, 이는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위치와 관련성을 보인다. 즉, 자녀는 부모와 비슷한 교육과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머물게 되고 부모와 비슷한 소득을 갖게 될 확률을 높이며, 이렇게 전달되는 부는 자녀의 교육, 건강, 자녀에 대한 투자정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대간의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일부 요인으로 보여진다.

3) 세금 및 보조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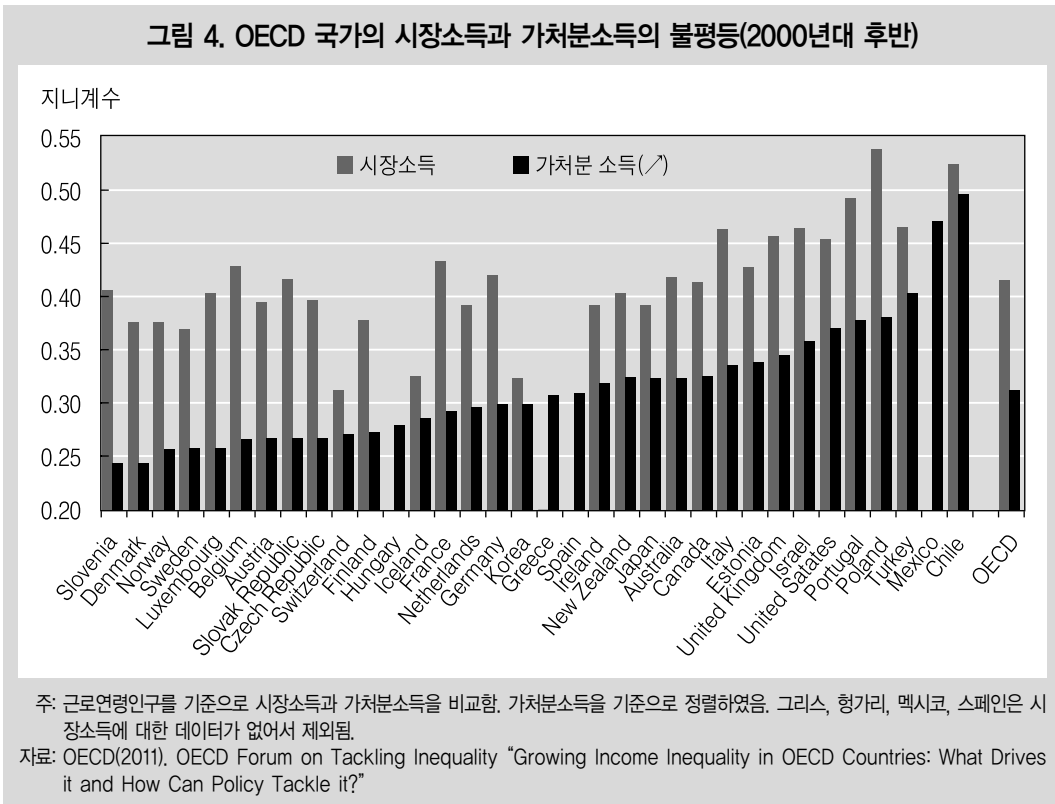
공적연금이전과 세금 및 보조금 제도와 같은 정부 정책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재분배 효과는 북유럽국가, 벨기에, 독일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칠레, 아이슬란드, 한국, 스위스, 미국에서는 재분배효과가 평균이하로 평가되어 그 효과가 가장 적었다. 근로연령층의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비교해본 결과 OECD 국가 중 약 1/4 국가에서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세금 및 보조금 제도 정책의 효과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율을 일부 상쇄 시켰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여, 1990년대 중반까지 OECD 국가의 시장소득 불평등을 50% 이상 감소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장소득 불평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세금과 보조금의 혜택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는 점차 감소하였다.

그 밖에도 노인인구의 증가, 편부모 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실업자의 증가, 저학력·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는 공적연금이전과 세금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금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재분배도 강조되어야 한다.

10) 여유진 외(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4. OECD 국가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2000년대 후반)



4. 맺음말

지금까지 OECD의 소득불평등 포럼내용을 기초로 하여 소득불평등 동향과 소득불평등을 심화 원인을 살펴보았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세계화,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력의 발달, 국제 무역의 활성화, 규제개혁의 변화, 동일한 계층과의 결혼, 세금과 보조금의 혜택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빈곤층이 많아지고 상위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불평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이전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서비스를 확대시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해 교육과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증대시키고, 건강, 교육, 주거 등 사회 서비스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고용의 접근 기회를 넓히고 빈곤에서 탈피 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와 훈련에 집중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및 임

시직 임금근로자에게도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한 혜택을 주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막는데 노력하여 고용불안을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육의 질과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와 같은 좀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고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요소들과 그것이 얼마나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소득불평등 동향의 일부분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 보건복지